

## < 국외훈련 결과 보고서 요약서 >

성 명	소 재 면	직 급	서기관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간	2022.08.10. ~ 2024.02.10
훈련기관	미주리 주정부 경제발부 (Missour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보고서 매수	100매
훈련과제	공유와 융합의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발전방안		
보고서 제목	공유와 융합의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발전방안		
내용요약	<p><b>I. 서론</b></p> <p>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반도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혁신성장이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디지털 경제가 각국의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p>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에 대한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전략자산임을 강조하며 해당 물자의 중국 의존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p> <p>세계 주요국들은 각자 국가의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상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채택하고, 일본은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각 주요국은 지식재산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도 주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각국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과 디지털 전환을 살펴보고, 지식재산 발전방안으로 ①책임운영기관 예산 자율성 확보, ②국가 핵심기술 특허관리 확대, ③특허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amp;D) 확대 3가지를 제안한다.</p>		

내용요약	<p><b>II. 미국의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b></p> <p>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국방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 간의 협업을 즉시 추진하여 &lt;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gt;을 진행했다. 미국은 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통해 1년 이내에 수십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전례 없이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산업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p> <p>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억제하고 국내로 회귀하도록 유도하는 &lt;리쇼어링(Reshoring) 정책&gt;에 중점을 두며, 해외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의 2020년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리쇼어링 활동과 외국인 직접 투자로 창출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수는 160년에 증가하여 총 649,202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p> <p>2021년 공급망 행정명령에 따른 &lt;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gt;를 통해 4개 핵심 분야(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에서의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으로 인해 공급망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p> <p>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2022년 8월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2,481억 달러(약 340조 원) 규모의 &lt;반도체 법(CHIPS Act of 2022)&gt;을 제정하였다. 또한, 미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 의료비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며 물가 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lt;인플레이션 감축법(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gt;을 제정하였다.</p>
------	--

<p>내용요약</p>	<p><b>Ⅲ.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별 지식재산 전략</b></p> <p><b>&lt;미국 상무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2022-2026)&gt;</b> 보고서는 상무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핵심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핵심 목표를 기본으로 5대 전략목표 및 23개 세부목표를 제시했다.</p> <p><b>&lt;일본의 지적재산 추진계획(知的財産 推進計画)&gt;</b> 보고서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아래에 있는 "구상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 이후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2022"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동 보고서는 ①일본의 지식재산 현황을 진단하고, ②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재전략 8개를 제시하였다. 일본의 지식재산 현재 상황은 ①혁신성장의 부족, ②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 ③혁신 성장에 공헌하지 못하는 일본의 지식재산 시스템 3개로 구성되어 있다.</p> <p><b>&lt;중국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강요(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gt;</b> 보고서는 2035년까지 지식재산 종합 경쟁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6대 전략 및 18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계획은 기간이 2021년부터 203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국이 경제적 발전과 혁신을 추진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전략과 과제에는 세부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다.</p> <p><b>&lt;EU의 지식재산권 행동계획(EU Intellectual Property Actionplan)&gt;</b> 보고서는 유럽 연합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다. 유럽 경제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IP)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①‘IP 보호 체계의 개선을 통한 단일화된 제도 마련, ②중소기업의 IP 이용 기회 증대, ③혁신을 위한 IP 공유 촉진, ④위조품 및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 강화, ⑤공정 경쟁의 장 마련’의 5대 도전과제를 제안하였다.</p>
-------------	---

<p>내용요약</p>	<p><b>IV. 주요국의 지식재산 서비스 디지털 전환</b></p> <p><b>&lt;미국, 종이 등록증의 전자 등록증(eGrant) 전면 전환&gt;</b>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1년 12월 10일 USPTO는 발명가 및 기업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 절차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특허 및 상표 등록증을 전자 발급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2년부터 특허 및 상표 등록증을 전자 발급으로 전환하였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된 특허 등록증을 다운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특허권자는 특허등록번호 부여 후 1주일 이내에 USPTO 인장과 국장의 서명이 있는 전자 특허 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졌다.</p> <p><b>&lt;중국,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14.5 계획&gt;</b>  2022년 1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14·5계획(知识产权公共服务“十四五”规划)(2021~2025)’을 발표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용 계획’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관련 전략을 세부화하여 동 계획을 만들었다.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14.5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제정된 최초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계획이다.</p> <p><b>&lt;영국, AI 기반의 상표 사전 출원 서비스 (Trade Mark Pre-Apply Service)&gt;</b>  2020년 10월 2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인공지능(AI) 기반 ‘상표 사전 출원 서비스(Trade Mark Pre-Apply Service)’를 시범 실시하였다. 동 서비스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표 출원인에게 유사상표 검색, 공격적 단어의 사용과 같은 부적합한 상표 여부 확인, 상표·서비스 지정상품 분류 식별, 출원 비용 견적 제공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p> <p><b>&lt;EU, 특허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gt;</b>  2021년 7월 21일 유럽 특허청(EPO)은 ‘통계·트렌드 센터(Statistics &amp; trends centre)’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최근 10년의 출원·등록된 유럽 특허 정보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이다.</p>
-------------	---

내용요약	<p><b>V.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발전 방안</b></p> <p><b>&lt;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예산 자율성 확보&gt;</b></p> <p>책임운영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1항은 책임운영기관장에게 행정, 재정,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다.</p> <p>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은 통제지향의 중앙집권적 관리방식을 통해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에 자율성이 부여되면 조직과 정원이 늘어나, 정부 전체의 조직과 예산이 확대된다는 강한 불신(不信)이 자리를 잡고 있다.</p> <p>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최근 3가지 논란이 있다. ①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책특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논란, ②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전출) 개정 논란, ③초과수입 사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경직성 논란이다.</p> <p>초과수입 사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당해 연도 초과수입은 당해 연도만 사용가능, 차년도 이월 사용 불가, ②방만 경영이라는 외부 비판적 시각에 대한 부담, ③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의 모호성이다.</p> <p>특허고객의 수수료가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대한 투자될 수 있도록 효과성 높은 지식재산 사업을 발굴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최소화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꾸준하게 재정당국을 설득하는게 중요하다.</p> <p><b>&lt;국가 핵심기술 특허관리&gt;</b></p> <p>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p> <p><b>&lt;특허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amp;D) &gt;</b></p> <p>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R&amp;D 전략의 수립을 지원하고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R&amp;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P-R&amp;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p>
------	--

<p>내용요약</p>	<p><b>VI. 결론</b></p> <p>기술패권 시대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전환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중·일·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IP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국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을 살펴본 결과 지식재산 발전을 위해서 “책임운영기관 예산 자율성 확보”, “국가 핵심기술 특허관리 확대”,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amp;D) 확대”의 3가지를 지식재산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p> <p>책임운영기관 예산자율성은 국회에서도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특허청 세입 예산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인정하였기 때문에 특허고객의 수수료가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대한 투자될 수 있도록 효과성 높은 지식재산 사업을 발굴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최소화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꾸준하게 재정당국을 설득하는게 중요하다.</p> <p>특허청은 2022년부터 15억6400만원을 투입해 신규 특허 출원의 국가핵심기술 관련성 분석과 산업연계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시작했다. 그동안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이뤄져도 별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모니터링이나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산업부가 선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12개 분야 모두 73개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p> <p>또한, IP-R&amp;D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R&amp;D 분야에 대한 선행특허 검색·특허맵 분석 등으로 기관에 최적화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는 특허청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확대가 필요하다. 다만, 일정 기간은 특허청 예산으로 진행하되 R&amp;D 수행 부처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여 점차적으로 내재화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p>
-------------	---